

# “북한 경제개방 가능성... 법제도 미리 준비”

김형남 다ول투자증권 상임감사  
‘북한의 금융 법제도 연구’ 논문 발표  
경제발전에 필요한 ‘금융 제도’ 강조



김형남  
다ول투자증권 상임감사

“우리(한국)가 먼저 금융 법제도를 잘 정비해 둬야, 북한이 자본시장을 형성하여 할 때 우리가 그 경험을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30여 년 동안 봉직한 뒤, 현재도 금융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형남 다ول투자증권 상임감사(국민대 법학박사, 북한·통일법전공)가 ‘북한의 금융 법제도 연구’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10일 김 박사는 매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이 자본시장을 연다면, 제 한적이겠지만 특정 지역을 개발해 외국인이나 일부 북한 주민들이라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자본시장 형성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북한에는 유가 시장이 없지만, ‘경제특구’를 지정해 해당 지역을 한정적으로 개방하고 외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합작법’은 이미 정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성공한 나라들이기에 참고 사례로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베트남은 식민지 시대와 분단을 겪었음에도 주요 금융 법제를 정비해 증권 시장을 성공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사례로 꼽힌다. 베트남은 1993년 증권시장 개장을 준비하면서 1996년 11월 20일부터 1998년 11월 20일까지 한국거래소(KRX)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베트남에는 ▲호치민 ▲하노이 ▲업콤(Upcom)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코스피(KOSPI), 코넥스(KONEX)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김 박사는 “북한은 세습체제가 공고해 체제유지가 최우선 가치며, 주민 경제 문제는 후순위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번에 시장 경제를 받아들

이라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나마 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거래할 수 있는 광물 자원이 많고, 금융 시장이 전무해 보이지만 암시장은 존재한다”며 “이런 자원과 시장을 활성화하여 정상 궤도에 올리고, 주민들이 자본을 형성해 기업 자금 조달까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박사는 금융과 경제 발전에 있어 ‘법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베트남 자본시장 설립을 지원했던 것처럼, 언젠가 북한에도 우리가 자본시장 구축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금융사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다양한 시도를 통해 얻은 경험이 있는 만큼, 북한이 자본시장을 형성할 때 한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입법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적용할 때 ‘법 안정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남북한 금융 제도의 공동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CEO 리스크’와 우리금융

### 기자 수첩

이 승 용  
(금융부)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을 꿈꾸던 우리금융의 계획은 점점 수면 아래로 들어가고 있다.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해 증권사를 인수했고, 1조5000억원을 투자해 보험사 인수에 나섰지만 결국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한방으로 모든 것이 원점이 됐다.

최근 불거진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악재로 금융당국 인허가 승인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징계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과 관련해 임 회장이 사전에 인지했

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지난 1~3월 자체 감사, 4월 자체 징계 과정에서 8월 9일 수사기관 고소 내용에 적시된 범죄 혐의 및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고 부당대출 건이 제때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이 명확하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올해까지 부당대출이 실행된 점과 우리은행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점에서 현 경영진의 책임론도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우리금융 현 경영진을 비판하면서 임 회장의 거취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금융은 현재 증권업에서는 집합투자과 장내·외 파생상품 등과 관련한 라이선스, 보험업에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생보사의 자회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이번 경영실태 평가에서 우리금융이 2등급을 받아야 하지

만 평가항목 중 내부통제 비중이 올해부터 높아지면서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다.

불과 지난 6월까지만 하더라도 증권·보험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을 꿈꿨지만, 정말 ‘한낮 꿈’이 되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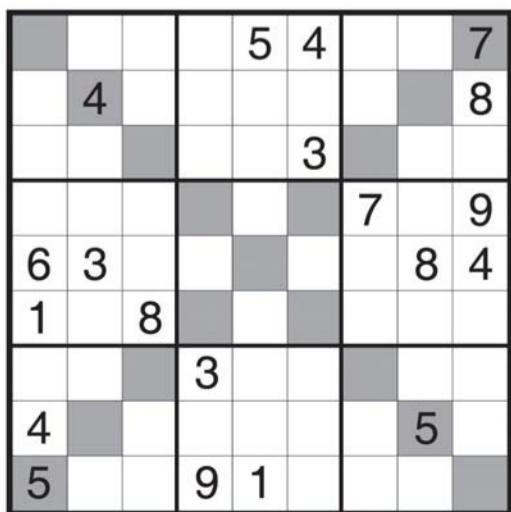
‘CEO 리스크’는 항상 신사업 진출 때마다 별목을 잡는다. 실제 카카오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으면서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 신용카드 등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키움증권도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사태 연루로 지난해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기를 추진하지 못했다.

우리금융이 신사업 진출을 통해 종합금융사로 거듭나려면 조직 쇄신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더럽혀진 몸’에 새 옷을 입는다고 몸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lsy2665@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3	9	1	2	4	7
4	9	2	7	8	6	3	5
7	6	1	3	4	5	8	9
7	1	8	4	5	2	3	6
1	7	9	5	2	7	1	8
6	3	9	4	1	3	6	9
2	5	4	1	7	2	9	3
8	1	7	2	9	3	8	4
9	4	5	6	7	1	2	3

## 김상회의四季

### 보은(報恩)과 역사 ②



“가서 내용을 고치고 오든지 거기서 죽든지” 불같은 선조의 명령에 겁을 먹으며 역관들은 돈을 모아 그의 흥령액을 채워주었고 그는 역관으로 합류했다. 이들이 산하이관(山海關)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명나라 병사가 조선 사신들이라고 하자 “그럼 혹시 홍씨 성을 가진 역관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순언은 “내가 홍씨”라고 대답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병사는 딱히 대답이 없었고 다시 길을 떠나 대도로 향하는데 대도 성문 밖에서 병사들이 일행 중 홍씨 역관을 모시러 왔다며 맞이할 준비를 했다. 곧 한 남녀가 다가오는데 그중 여성은 바로 그가 돈을 주었던 류씨였다. 그녀는 “그때 주신 돈으로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 장례를 치렀고 부친의 지인들께 인사를 다니던 중 원래 친분이 있던 석씨 집안에 인사를 갔다가 지금 남편인 석성(石星)을 만나 혼인했다”라며 남편을 소개했다. 석성은 “결혼 후부터 아내에게 계속 이야기를 들었으며 이런 시대에도 아직 이런 의인이 있다는 걸 깨닫고 꼭 만나뵙고 싶었다”고 했다. 이들 일행은 응승한 대접을 받았다.

석성은 지금의 교육 및 외교부 차관급에 해당하는 예부시랑의 높은 관직에 있었고 홍순언이 그간의 종계변무 문제를 석성에게 말했다. 일주일 만에 명서明書 개정판뿐만 아니라 일행이 갖고 귀국할 사본 한 절까지 제작되었다. 애당초 명나라의 국가 기록물 관리 자체를 예부에서 관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석성에게 권한이 있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홍순언과 일행은 의기양양하게 귀국했고 선조는 150년 묵은 문제를 해결하니 크게 치하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석성이 수레 한가득 실려 보낸 비단이 도착해 있었다. 여기에 ‘보은’(報恩)이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는데 류(柳)씨가 한 수 한 수 정성껏 수를 놓은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 721-9851, 9826 / 02) 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551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 3월 09일 제161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